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의 문제들*

김치완**

- I. 난민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의 전제
- II. 월경(越境), 타자의 출현
- III. 봉쇄(封鎖), 타자의 배제
- IV. 추방(追放), 타자의 상실
- V. 면역(免疫, im-munitas)의 시간과 난민

국문초록

근대의 '난민'은 양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난민 문제가 근대 국민국가의 기원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최근 마주하는 난민의 출현은 근대 국민국가의 분할 또는 새로운 탄생과 연동하는 '경계 밖으로 쫓겨난 삶', 곧 이산(離散, Diaspora)을 배경으로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난민 문제는 공간과 삶의 양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 연구는 <'쿵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을 주제로 한 철학 분야의 토대 연구에 해당한다. 난민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는 "낮선 것, 다른 것에 대한 '혐오'"가 인류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공고함을 절감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타자인 난민의 출현이 국경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3627). 아울러 이 연구는 2020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쿵다로 푸는 난민의 출현과 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읽고 보탠 것임을 밝혀둔다. 아낌없이 질정해주신 위 학술대회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E-mail: dgips@hanmail.net)

라는 물리적 경계는 물론, 그것을 내면화한 의미로서 경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사실상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 국민국가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결과로 직결되는 이유를 ‘국경의 봉쇄, 타자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유럽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난민을 추방하는 것은 주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타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타자로서 배제하고 추방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로베르토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는 난민의 출현이 근대국가가 면역적 강박 속에서 전지구적 세계(mondo globale)를 정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근대화가 자기 면역화를 밀어 붙인 과정이라는 에스포지토의 통찰은 난민 문제가 자기 내부의 갈등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면역화 메커니즘에 대한 반성의 계기와 시간을 제공한다.

주제어 : 난민, 타자, 월경, 봉쇄, 추방, 탈구축,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I. 난민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의 전제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12년 2월 10일에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는 難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¹⁾

1) 『난민법』[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근대의 “난민”은 양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발생했다.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유럽 국가들이 무너지고, 유럽의 인구와 영토가 재편되면서 약 4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조국을 떠나는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다. 그 앞에는 국민국가의 모델에 따른 평화조약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국민 조직의 인구 중 1/3이 일련의 사문화된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소수민족이라는 대혼란이 펼쳐져 있었다.²⁾ 이렇게 해서 유럽 난민 문제가 발생하자 국제연맹에서 고등판무관을 임명하는 등, 국제연합(UN) 출범 이전부터 이미 초국가적,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었다. 1945년 국제연합 출범 후에는 유엔 구호 및 재건기구(UNRRA;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와 국제난민기구(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등 관련 기구가 설치되었고,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도 설치되었다.³⁾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된 난민의 출현은 근대 국민국가의 분할 또는 새로운 탄생과 연동하는 '경계 밖으로 쫓겨난 삶, 곧 이산(離散, Diaspora)을 배경으로 한다. 이 지점에서 난민 문제는 공간과 삶의 양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산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유에 얽매인 삶, 곧 '경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유목(遊牧, Nomad)을 갈망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현실에서 이 경계 없는 자유로운 삶의 양식은 자본을 소유한 소수의 예외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유토피아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타자(他者)인 우리는 이산하는 난민일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소외시켜야 비로소 그 이상향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부조리가 우리로 하여금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것이다.

철학적 질문은 인문학의 정체성을 반영한 “되물음”이다. 시장경제와

2) 하용삼·배운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아감벤의 국민, 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2집, 대동철학회, 2013, 93쪽.

3) 홍정화·김은혜, 「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5권 4집,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9, 47-62쪽.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의 경제구조하에서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인문학은 학문의 성격상 경쟁성(rivalry)과 배제성(excludability)을 내포하지 못하기 때문”⁴⁾에, “인문학이 사회적 맥락(context)을 구비하여야 하고 동시에 정책(policy)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⁵⁾는 처방은 현실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무용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통렬한 자기 고백과 처방으로 포장된 이 비현실적이고 무용한 주장은 철학적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유용하다. 철학적 질문은 “우리가 믿고 또 물음에 답하는 것의 의미와 뜻에 대한 태도”⁶⁾를 요구하는 것이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왜 경합성과 배제성을 내포하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되묻는 것은 인문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철학적 질문, 곧 되물음은 다양한 질문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킨다. “인문학, 경합성, 배제성, 상품 등의 개념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인식할 수 있으며, 실재하는 것이기는 한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춘 상품이 되어야만 한다는 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인식과 추론, 판단과정은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들은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지” 등등 수많은 연관된 질문들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늘 질문하는 처음으로 돌아온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모른다”는 사실일 뿐인, 대답이 필요 없는 되물음이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에머리히 코레트(Emerich Coreth)가 말한 “인간학적 순환”이다.⁷⁾

이 연구는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을 주제로 한 철학 분야의 토대 연구에 해당한다.⁸⁾ 난민의 출현과 대응, 상실은 근대

4) 박경하·이석희, 「인문학의 사회적 실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7회 인문학학술대회:사회 속의 인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62쪽.

5) 박경하·이석희, 위의 글, 65쪽.

6) Moritz Schlick, 안중수 옮김, 『연관된 철학의 문제들』, 고려원, 1992, 77쪽.

7) Emerich Coreth, 진교훈 옮김, 『철학적 인간학』, 종로서적, 1986, 3-18쪽.

8)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은 <‘쿰다’로 푸는 제주 섬의 역사와 난민>이라는 연구주제로 선정되었다. ‘쿰다’는 ‘품다’, ‘포용하다’를 뜻하는 제주어로, 제주 예맨 난민 문제로 촉발된 난민 문제를 돌

이후 “본질적인 통일성 대신 차이에 주목하면서 다양성들의 상호협력적 변화들을 강조”⁹⁾해 왔다는 모더니즘의 기획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되묻는 계기를 제공한다. 난민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는 “낮선 것, 다른 것에 대한 ‘혐오’”가 인류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공고함을 절감하고 있고, 그래야만 한다. 과거와는 달리 혐오가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으로서, 모욕적인 배제의 언어표현이라는 정해진 양식, 왜곡된 연상과 이미지, 혐오감정을 정당화하는 인식의 틀, 훈련되고 양성되는 과정 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개인의 혐오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II. 월경(越境), 타자의 출현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까지 국내외로 강제적 이주를 당하거나 난민으로 지내는 사람은 전 세계 총 7,144만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최근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제는 아시아 지역 출신 보호대상자는 물론 아시아 지역 비호국가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어서 관련 국제조약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현재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 국가에 불과할 정도이다. 그래서 난민 문제를 주로 불법 이주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어 왔다.¹¹⁾ 2013년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난민

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제주의 ‘포용’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난민의 출현과 대응과 관련된 철학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 9) 김세서리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시대, ‘포용(inclusion)의 정치학을 위한 유교적 시론」, 『유학연구』 제46집, 충북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451-474쪽.
- 10) 김용환, 「혐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가톨릭철학』 31집, 한국가톨릭철학회, 2018, 8쪽.
- 11) 임진희, 「난민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관련 정책 연구: 유럽 난민문제를 중

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2018년 초 예멘 난민 500여 명의 출현과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듯이 난민 문제 대응은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대국민국가가 출범한 후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 출현은 베트남 전쟁 이후인 1977년 9월 교민과 함께 철수한 베트남 난민들을 수용하는 베트남 난민보호소가 부산에 설립된 때로 볼 수 있다.¹²⁾ 법적으로 난민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92년)’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93년)’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이다.¹³⁾ 하지만 이렇게 아시아 지역 국가에 비해 일찍 난민 대응체제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정작 한 명도 없었다.¹⁴⁾ 이런 사정으로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 문제”가 유럽연합국가의 정치적 지형까지 바꾸어 놓은 급박한 사태와는 무관한 듯이 보였다.¹⁵⁾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1일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예멘 난민 500여

심으로, 『現代中國研究』 20권 3호, 현대중국학회, 2018, 115-152쪽.

12) 박종일 외,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223쪽. 참전국이었던 한국은 현지의 피난민을 한국으로 疏開하였는데, 베트남인 910명, 중국인 31명, 필리핀인 1명이 교민들과 함께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였는데, 1989년까지 입국한 베트남 보트피플들은 전원 제3국으로 송출되었다.

13) 소운정·정은배, 「한국 교회와 국내 난민 선교」, 『성경과 신학』 87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8, 67-68쪽.

14)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운영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 신청자는 철회한 사람을 포함하여 대략 5만 명 정도이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950명, 인도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2000명 정도 수준이다. 특히 2013년 9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로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 2017년 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내용은 <유경동,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 『신학과 사회』 33권 2호,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이카데미, 2019, 33쪽>과 <소운정, 정은배, 위의 글, 65쪽>을 참조하였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숫자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신청 건수가 예멘 난민을 “난민의 출현”이라고 말할 만큼 적었던 것은 아니다.

15) 김용환, 앞의 글, 21쪽.

명이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면서 여론의 집중을 받게 되었다. 예멘 난민의 출현은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015년 이후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이 봉쇄적으로 변화하자, 유럽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진 예멘인들은 같은 이슬람 종교권인 말레이시아행을 택하였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체류심사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제3국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열렸고,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 난민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하였다.¹⁶⁾ 이로써 그동안 이민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 담론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는 유럽발 난민 문제에 제대로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 국가가 이제야 국제적인 난민 문제에 제대로 직면하게 된 이유는 후발 신생 근대 “국민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침탈과 함께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이중성을 겪어야 했다. 해방 이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투쟁은 정치·사회적 주체인 민족으로서 “nation”을 형성하는 과정이면서, 민족에 의해 근대국가인 “state”를 형성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와는 달리 제국주의 총독부에서는 “nation”을 근대적 개인으로 형성하면서 “국가 없는 민족”의 식민지근대화를 추진했다. 해방과 함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주체였던 민족(nation)과 식민지근대화를 경험한 근대적인 개인(nation)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결합될 담론 공간이 열렸지만, 냉전체제구축으로 좌절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은 근대적 개인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채 “국민 없는 국가”로 출범해야 했다.¹⁷⁾

현대 정치철학의 이론에 따르면,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nation)과 난민, 시민과 인간, 그리고 “삶의 형태(form of life)”와 “벌거벗은 생명(naked life)”을 나누는 경계다. “물리적 경계”와 연동하는 국가의 “의미

16) 홍정화·김은혜, 앞의 글, 53-54쪽.

17) 홍태영, 「4·19와 국민국가의 계기」, 『문학과 사회』 23권 제1호, 문학과 지성사, 2010, 247-248쪽.

로서 경계” 안의 “국민-시민”은 국가에 의해서 인권이나 생존권을 보장 받고, 귀속성과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이것이 17세기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유럽에 등장하여 전 세계로 확대된 “국민국가질서 (nation-state system)”이다. 이 질서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된 국민 (na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의 주권을 모아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치 권한을 지닌다(내정불간섭의 원칙). 그리고 개인은 국가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고 보호받게 된다.¹⁹⁾

국민국가질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견고하게 구축된 국가경계를 위태롭게 넘는 사람들이 근대 이후 난민이다. 이들의 越境은 단순히 국경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은 행위”가 아니라 그것과 연동하는 “의미로서 작용하는 경계를 넘은 행위”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물리적 경계’가 미리 그곳에 확정되어 있듯이, 국가의 ‘의미로서 경계’가 이미 국민의 내면에 각인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비국민(식민지의 인민)을 국민으로 동화시키거나 국민 중의 일부(유대인, 팔레스타인인, 집시 등)를 비국민으로 배제하면서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타자(비국민·난민·무국적자, 미개인 등)로 만든다. 그와 동시에 동화될 수 있는 국민이나 배제하고 남은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 이때 비로소 국민은 스스로 ‘물리적 경계’에 상응하는 ‘의미로서 경계’를 내면화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타자를 차별·적대하게 된다.²⁰⁾

근대 국민국가의 허락 없이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배타적 충성의 원리를 저버리는 것이면서 “의미로서 경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국가 없는 민족”의 기억을 가진 근대적 개인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

18) 하용삼·배윤기, 앞의 글, 94쪽. 이 글에서 인용한 “삶의 형태(form of life)”와 “벌거벗은 생명(naked life)”은 아감벤(G. Agamben)의 용어로, 각각 “한 개인이나 집단이 고유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모든 생명체(동물, 인간 혹은 신)에 공통되는 살아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조에(zoē)”를 뜻한다.

19) 박종일 외, 앞의 글, 200쪽,

20) 하용삼·배윤기, 앞의 글, 88-91쪽.

한 채 “국민 없는 국가” 형태로 출범한 대한민국에서는 이 점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국가권력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정당성을 냉전 질서의 압도적인 규정력에서 확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에 대한 국민의 우위에 이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우위 현상, 곧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독점이 만연했다.²¹⁾ 국민 없는 근대 국민국가가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대적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국가폭력과 그에 맞서는 항쟁의 역사를 만들었다. 예컨대 제주4·3은 아직 태동기에 있던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이요, 4·19혁명은 민주주의 주체로서 등장한 시민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선 혁명이었다.

“국민 없는 국민국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가폭력과 항쟁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다. 멀리는 제국주의 강점기에 전 세계에 이산했던 朝鮮難民을 비롯하여, 제주4·3을 전후한 재일제주인 및 재일조선인, ‘48년 체제’ 이후 38선 이남의 內的 난민,²²⁾ 한국전쟁시기 난민과 제3국행 반공포로, 그리고 해외입양 전쟁고아, 개발독재와 군부독재, 그리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난민 등 “국민 없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난민이 발생했다. 경계 안에서 이렇게 난민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기 때문에, 경계 밖에서 출현하는 난민은 주의를 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지되지도 못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2000년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직후인 2001년이 되어서다.²³⁾

이 점은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물리적 경계”와 그것을 내면화한

21) 홍태영, 앞의 글, 249-255쪽.

22) 김준현, 「‘48체제’와 38선 이남의 내적 난민들」, 『돈암어문학』 제32집, 돈암어문학회, 2017, 237-263쪽. 난민은 越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내적난민’이라는 기호는 형용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월북이나 전향 등과 다른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소외된 채 ‘구호’나 ‘감시’의 대상이 된 이들을 ‘내적 난민’으로 표현하였다.

23) 박종일 외, 앞의 글, 204쪽. 우리나라 최초의 난민 1호는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본국에서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199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한 지 7년이 지나서야 난민인정 판결을 받았다.

“의미로서 경계”가 얼마나 공고한지를 반증한다. 그러나 “조국 근대화”를 완수할 방법인 산업화를 기치로 내건 개발독재와 군부독재가 무너지면서 때마침 불어닥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요구 때문에 이 경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군부독재시절인 1983년 제한적인 해외여행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²⁴⁾ 문민정부에 이르러서 세계화는 군부독재시절까지 공고히 지켜온 “의미로서 경계”를 새롭게 하는 이른바 “신한국 창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래 경계를 따라 일정하게 구획되는 공간은 용도와 목적을 내세운다. 이 용도와 목적에 따라 공간은 팽창 ‘혹은/그리고’ 압축되는 경향을 보인다.²⁵⁾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가 확정된 후 가속화된 서구 근대의 산업화 혹은 근대화 과정은 글로벌통합성(globality)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간의 경계를 세계 전체로 밀어내고 팽창시키면서, 공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압축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러한 공간의 팽창 ‘그리고’ 압축은 “근대의 기획”을 완성시키겠다는 목적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는 시간의 공간화가 수반된다. 근대적 문명을 선도하는 영역인 서구 선진 근대 국민국가와 이를 따라가기 위해 자기 기율을 실현해야 하는 전근대적 영역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후발 근대 국민국가를 나누는 위계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유럽통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른바 국제기구들이다.²⁶⁾

공간의 팽창 혹은/그리고 압축, 시간의 공간화를 통한 위계화 덕분에

24) 1983년 1월 1일 만 5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1년간 200만 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에 유효한 관광 여권을 발급하였다. 전면 자유화는 198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25) 용도와 목적에 따라 공간은 팽창 ‘혹은’ 압축하지만, 팽창하면서 동시에 압축하기도 한다.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그리고’라는 기표를 사용하였음을 알려둔다.

26) 하용삼·배윤기, 위의 글, 87-88쪽.

글로벌시대에 이르러 죽은 노동인 자본은 국가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지만, 살아있는 노동인 노동자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난민 혹은 불법체류자가 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를 온몸으로 겪었다.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우리 경제가 단기외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 비해 외환보유고가 턱없이 부족했던 데 있다. 그 바탕에는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고도성장 요인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주도 성장 위주’ 경제 모델을 지속함으로써 경쟁력이 하락한 상황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1980년대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표준(global standards)을 중심으로 탈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재편되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이미 하나의 시장이 된 지구적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해야만 했던 것이다.²⁷⁾

2015년이 유럽연합을 넘어 ‘세계 최악의 난민 위기의 해’로 손꼽히는 이유는 “5년을 넘은 시리아 내전과 함께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으로 발생한 난민, 아프리카의 수단 등 몇몇 실패국가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²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 난민 문제는 대개 국제정치적, 지리적, 지정학적, 역사적, 종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2015년 난민 위기를 초래한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내전과 불안정한 정세에는 글로벌시대 공간의 팽창 혹은(그리고) 압축, 시간의 공간화를 통한 위계화가 공통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장기간 종족·종교·독재·부패 등에 의한 내란과 내전이 빈발하던 해당 지역 국가들에 미국을 위시한 서구가 현지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세계표준, 곧 서구 중심의 근대 국민국가질서를 이식하려고 한 탓에 이전보다 더 불안정한 지역

27) 김치완, 「문화적 형식으로 ‘재현’된 2010년대 근대해항도시 제주의 표상」, 『島嶼文化』 제48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6, 160-161쪽.

28) 안병익,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대내외적 변화: 2015년 난민위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68권, 한국민족연구원, 2016, 5-6쪽.

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⁹⁾

2015년 유럽연합의 난민 위기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연동된다. 서구 중심의 근대 국민국가질서의 이식실험은 유럽 난민의 대규모 출현을 초래하였고, 그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근대 국민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그에 따른 난민의 출현을 충분히 경험했던 유럽연합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 만들기과 경계를 따라 팽창 혹은/그리고 압축하는 공간, 그것에 연동하는 시간의 공간화와 위계화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증거다.

본래 난민의 출현은 “전지구적 과정이지만, 또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역별로 상이하게 확산”³⁰⁾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산물이다. 근대 국민국가 내에 형성된 축적의 위기를 공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추진된 유럽통합이 유럽 난민 문제를 겪으면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이자, 한계다. 하지만 이 한계가 신자유주의의 종말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다발적으로 진행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Ⅲ. 봉쇄(封鎖), 타자의 배제

난민의 발생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는 이유는 근대 국민국가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이고 오직 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배타적 국민 구성의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글로벌화나 일부 신생 국민국가의 실패에 따른 난민의 대규모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물리적 경계”와 그

29) 임진희, 앞의 글, 128-131쪽.

30)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의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한국학논집』 제4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28쪽.

와 연동되는 “의미로서 경계”가 약화될 수 있고, 결국은 경계에 대한 국민국가의 통제를 허물어뜨려 글로벌 혼란의 시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입국가에서 엄격한 인정절차를 유지하고 있어서, 급증 추세 대비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³¹⁾ 따라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에 대한 통제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그런데도 “의미로서 경계”를 내면화한 “근대적 개인”들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

유럽연합에서 난민 신청자는 2013년 40만 명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2014년에는 62만여 명으로 50% 정도 늘어났다. 2015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해 132만여 명 정도로 늘어났다. 2014년에서 2015년의 유럽연합 난민 신청자의 국적은 시리아 출신이 제일 많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순인데, 이들 나라는 2014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세를 보였다. 한편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의 수”는 경제력과 외교력을 기준으로 한 주요 4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가장 많고, 영국이 가장 적다.³²⁾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은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자유·안보·사법 영역(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AFSJ)에 포함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평화추진에 이어서 AFSJ의 형성이라고 선언했다. 그만큼 유럽연합에서 난민 문제의 대응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 1990)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계가 사라지면, 비회원국과 국경을 맞댄 회원국들의 국경이 모든 회원국의 공동국경이 되었기 때문이다.³³⁾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은 이 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을 대표하는 더블린 협약에서는 회원

31) 박종일 외, 앞의 글, 228-229쪽.

32)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유럽연합 난민 신청 증감 추이, 유럽연합에서 난민 신청자의 국적(2014년과 2015년 비교), 유럽 난민 신청자 추이(처음 신청자 기준) 관련 도표는 <안병역, 앞의 글, 7-9쪽>을 참조할 것.

33) 안병역, 위의 글, 11쪽.

국 중 첫 도착지(country of first entry)가 난민 지위 신청 접수의 책임을 갖는다고 정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제3국 국민이 유럽연합 역내에 도착해 여러 회원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난민 쇼핑(venue shopping)’이 일어날 뿐 아니라, 비회원국과 국경을 맞댄 회원국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³⁴⁾

문제는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더블린 협약의 ‘도착국가 우선 원칙’이 이른바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및 ‘안전한 출신국가(safe country of origin)’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따르면, 난민이 유럽에 당도하기 전에 경유한 국가가 난민신청이 가능한 안전한 국가라면 그 나라에서 난민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출신국가가 안전한 국가라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난민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총 17개 국가와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을 체결해 유럽으로 진입한 난민이라 하더라도 재입국협정 체결국인 제3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입국협정이란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난민 또는 불법이민자를 출발지나 경유지로 이송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제3국이 맺은 협정이다. 일방적인 추방은 출신지나 경유지 국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절차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재입국협정은 상호 의무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방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라고 비판된다.³⁵⁾

난민 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유럽 난민 발생 규모가 유럽연합의 기존 공동난민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관용적 정책 덕분에 단기간에 많은 신청자가 유입된 독일은 비용분담 차원에서 공동난민정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체류 중인 12만 명의 난민을 회원국의 경제력과 인구에 따라 강제로 배분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그리스와 이탈리아 해안지역에 난민 핫스팟(Hotspot)을 설치했다. 이곳에는 유럽

34) 최진우,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문화와 정치』 3권 1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6, 126쪽.

35) 최진우, 위의 글, 126-127쪽.

난민지원센터(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 프론텍스, 유럽 경찰협력기구(Europol), EU사법기구(Eurojust)의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해당국 관계자들을 지원했다. 그리고 250만 명이 넘는 중동 난민을 받아들인 터키에 경제지원을 하는 대신, 난민의 유럽 유입 저지와 일자리 제공을 요청했다.³⁶⁾

2015년 유럽난민 위기 당시 유럽연합의 난민 대응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독일의 ‘환영문화(Wilkommenkultur: culture of welcome)’와 메르켈 수상의 ‘개방정책(open-door policy)’으로 나타난 관용적 태도, 집행위원회가 추진했던 난민할당제, 앞서 두 가지 태도에 저항하는 경유지 국가 중부유럽 국가들의 장벽 설치, 그리고 이른바 ‘부적격 난민’들의 송환에 대한 터키와의 합의 등이다. 이 가운데 더블린 협약의 ‘도착국가 우선 원칙’을 유보했던 메르켈 수상과 독일의 적극적인 난민수용 조치는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처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난민 유입의 규모가 너무 크고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발표 후 두 달여만인 10월 21일부로 더블린 협약의 재적용을 선언하는 것으로 퇴보했다. 그리고 메르켈 수상과 집권 기민당은 관용적인 난민정책 때문에 독일 내에서 정치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난민 16만 명의 분산수용을 위한 난민할당제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혔다.³⁷⁾

중동부 유럽 회원국들의 주장은 근대 국민국가의 난민 대응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서유럽 회원국에 비해 중동부유럽 회원국은 상대적으로 국내상황이 좋지 않은데 동일한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지 10년 전후인 중동부 유럽 회원국의 난민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리고 일시적 난민 할당이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강대국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문제의 근본 해결은

36) 안병익, 앞의 글, 13-16쪽.

37) 최진우, 앞의 글 128-129쪽.

시리아 내전의 종식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들 대다수는 코소보와 마케도니아 학습효과를 우려했다. 곧, 유입 인구 증대에 따른 민족간 구성 분포 변화로 인한 지역 내 주민족과의 갈등과 충돌을 우려했던 것이다.³⁸⁾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수정된 공동난민정책이었던 만큼 유럽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인 보조성(subsidiar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동부유럽 회원국에서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난민의 대규모 발생이 근대 국민국가의 물리적 경계와 그에 연동하는 의미로서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대로 반증하는 사례다. 그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에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단일시장을 형성하지는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 된 유럽’, 곧 경계가 허물어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쉽게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인도주의적 동기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참회의 마음, 그리고 난민수용을 통한 경제 활력 기대’라는 배경을 가진 난민 문제에 대한 “메르켈 수상의 지극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접근”이 좌절된 것은 “상황에 따른 현실적 대응일 뿐”이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인 태도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³⁹⁾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을 전제로 한다. 유럽연합이 출범할 즈음의 유럽 정상들은 난민에 대한 거부가 유럽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모순되기 때문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좀 더 개방적인 유럽연합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국민, 비유럽연합인, 곧 他者로 인식한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고수해온 것이다.⁴⁰⁾ 그리고 난민이 수용국의 국가 안

38) 김철민, 「EU 난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관점과 전략」, 『EU연구』 제4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35-42쪽.

39) 최진우, 앞의 글, 127-128쪽.

40) 국민호·양연희,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디아스포라연구』 13권 1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9, 107-108쪽.

보 및 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될 때 난민 유입은 수용국 국민들의 불안함과 반감을 부추기게 된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기다렸다는 듯이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목도되듯이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고 봉쇄된다.

난민 문제는 보편성과 동일성에 기반을 둔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로, 경계를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타자로서 출현한 난민은 그동안 근대 국민국가가 ‘타자’에 대한 사유의 거부 속에서 끊임없이 동일화 과정을 수행해온 사실을 주의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난민의 출현과 대응과정에서 목격되는 ‘근대성과 국민국가’의 위기는 근대성의 과정에서 억압되고 배제되었던 타자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공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동일성의 지배” 철학을 무너뜨리고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의 의무를 주장함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통한 새로운 주체성, 진정한 주체성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라는 공동체와 그 틀 속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통해 구현된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타자를 환대나 관용의 객체가 아닌 우리와 함께 “여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로 확장되어야 한다.⁴¹⁾

하지만 이러한 기대나 당위와는 달리, 유럽연합의 중동부유럽 회원국 대응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 경계’와 그에 연동하는 ‘의미로서 경계’는 이전 수준으로 봉쇄되면서 오히려 강화되고, 타자로서의 난민은 관용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 점은 유럽연합보다 난민 대응 정책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좀 더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제주 예멘 난민이 주목받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예멘 난민들의 대거 입국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난민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언론을 통

41) 홍태영, 「타자의 윤리와 환대 그리고 권리의 정치」,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93-105쪽.

해서 유럽 난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접했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난민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예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2018년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은 5일 만에 22만 건의 동의를 기록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급증하는 난민 탓에 국내 치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므로 인도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난민심사관과 전문통역직원 부족으로 예멘 난민 심사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찬반 여론은 뜨거웠고, 2018년 6월 예멘 난민 심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정책적 미비점과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이 무색하게도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발의된 8건의 난민법개정법률안 및 폐지안 대부분은 난민에 대한 보호보다는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골자로 하는 안이었다.⁴²⁾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한국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이 집행된 것은 2018년 12월 14일이었다. 이 날 2명은 난민 인정, 412명은 인도적 차원으로 국내 체류를 허가, 56명은 단순 불인정, 14명은 출국 등으로 직권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⁴³⁾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을 4%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였다. “그들이 소지한 통신기기와 한국 난민제도에 대한 높은 정보력으로 인해 ‘의도된’ 피난이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었다.”⁴⁴⁾는 것은 난민 인정 사유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2018년 12월 5일 기준 2차 심사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출입국관리

42) 홍정화·김은혜, 앞의 글, 54쪽,

43) 임진희, 앞의 글, 118-119쪽.

44) 홍정화·김은혜, 앞의 글, 55쪽,

법을 적용하여 심사시간 중 예멘 난민의 출도제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난민 대응에 대한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난민 대응 정책에 관한 철학적 문제로는 관용과 환대, 포용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관용은 타자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하는 것이며, “타자 배제를 배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 비판적 독해가 그러했던 것처럼, 관용마저도 “타자를 향한,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함하는 것이면서도” “주권의 오만함이 묻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에 비해 환대는 주체가 타자를 손님으로 맞이하는 자세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타자적인 관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개념이다. 그런데 환대는 이름과 출신을 묻는 주인의 질문에 손님이 답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보증하고 환대받아야 할 권리를 확보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데리다는 타자를 환대하는 데 상호성을 요구하기도, 이름을 묻지도 말며, 타자 스스로 환대에 필요한 조건들을 말해야 할 것도 요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⁴⁵⁾

독일의 환영문화와 메르켈 수상의 개방정책으로 나타난 관용과 환대는 2015년 유럽 난민 위기에 대처하는 유럽연합의 공동난민정책은 물론, 유럽통합의 심화를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실험이었다. 두 달여 만에 철회했어야 했고, 자국민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야 했으며,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중동부유럽 회원국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이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직 아니다. 독일의 유럽(das deutsche Europa)을 우려한 유럽 회원국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에 직면한 내부의 반발은 극복될 수 있고, 극복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난민 위기의 대응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초래한

45) 김세서리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시대, ‘포용(inclusion)의 정치학을 위한 유교적 시론」, 『유학연구』 제46집, 충북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456-457쪽.

모순이고,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심각한 한계에 달했다는 징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자의 배제가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관용과 환대를 넘어선 대응이 요청되는 것이다.

IV. 추방(追放), 타자의 상실

난민 인정을 둘러싼 논쟁의 근원에는 그것이 “철저히 시대적 과정과 구조 속에서 일어났지만”, “개인의 결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있다. 이 사실 때문에 경제적 목적을 쫓아 온 이주민인지, 전쟁과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온 난민인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과연 개인이 외부적인 환경과 구조의 제약 없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경계를 넘는 난민과 근대 국민국가질서에 대한 “지루하고도 결론 내기 어려운 논쟁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때 관용적 태도를 보였던 독일에 주목해볼 수 있다. 전후 독일은 잃어버린 독일영토와 점령지로부터 추방된 추방 난민의 ‘귀환’, 동독인들의 ‘탈출’, 지중해연안 국가들로부터의 ‘노동이민’, 동구권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정치적 동요와 민족적 분쟁으로 생겨난 ‘정치적·경제적 난민’ 등 다양한 형태의 난민을 겪었기 때문이다.⁴⁶⁾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독일인 가운데 동유럽과 남유럽 독일 점령지에서 피난길에 오른 난민(Flüchtlinge)과 포츠담 회담 결과로 추방당했던 피추방민(Vertriebene)은 대략 1천 2백에서 1천 4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련점령지역과 동독에 정착한 피추방민들은 “이주민(Umsiedler)”으로 불리다가 “신시민(Neue Mitbürger)”으로 불리면서 서서히 잊혀갔다. 당시 동독정부에게 신시민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한

46) 이용일, 「추방, 탈출, 난민: 독일문제와 이주(1945~1998)」, 『역사와 세계』 38, 효원사학회, 2010, 91-97쪽.

사회통합을 상징했지만, 이들 대부분에게 동독은 서독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였다. 그래서 1/3에 해당하는 7백 12만 3천명이 1946년부터 1961년까지 동독을 떠나 서독에 정착했다. 전후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던 서독인들은 이들을 낯선 이방인으로 여겼다. 설상가상으로 탈동독자들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회통합은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전후 역동적인 경제재건에 필요한 인력난을 이들이 메우면서 사회통합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⁴⁷⁾

피추방민의 서독행과 사회통합에는 ‘독일문제(Deutsche Frage)’가 연결 고리로 작동되었다. ‘독일문제’는 중세 이래 천 년 동안 독일을 하나로 묶어왔던 신성로마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 1806년에 해체되자, 독일인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정치적 틀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된 문제이다. 주변국과는 달리 자연 경계를 갖지 못한 ‘개방적 경계’라는 특수성과 국민국가질서의 ‘의미로서 경계’가 작용한 것이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유럽의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806년에 최초로 제기된 ‘독일문제’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 승리한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1815-1898)가 1871년 독일제국(das Deutsche Reich/Kaiserreich)을 선포함으로써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탄생한 독일 국민국가가 주변국가들과 투쟁하면서 독일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독일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전후 피추방민의 서독행과 사회통합에도 작동한 것이다.⁴⁸⁾

전후 피추방민과 서독인에게서 독일의 패전과 그에 따른 강제추방, 곧 구조로서 ‘독일문제’가 난민의 출현 및 대응과 관련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는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시장의 탄력성 확보라는 경제적인 요인이 컸다. 이것은 추방이 거의 종결된 1950년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이 폴란드에서 추방당

47) 이용일, 앞의 글, 99-101쪽.

48) 정효숙, 「독일문제는 해결되었는가?—독일문제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세계』 50, 효원사학회, 2016, 65-70쪽.

하지 않은 원인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휴머니즘적인 배려라기보다” 그들의 대부분이 “폴란드 경제가 재건을 위해 필요했던 고급인력들”이었다.⁴⁹⁾ 이후 동서독 분단과 함께 시작된 체제경쟁 속의 탈동독 현상, 1960년대 대규모 노동 이민, 전체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던 동독인들의 탈출과 동유럽 난민 이주 과정에서 ‘독일문제’와 경제적인 요인은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관용적인 태도와 정책을 펼치는 근거가 되었다. 타자인 난민과 이주민들이 경제부흥의 주체로서 가능한 것이다.

냉전 시대 동·서독정부는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를 내세우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의 ‘독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종식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독일통일과정에서는 걸림돌로 작동했다. 그래서 1990년 9월 체결된 ‘2+4협약(Zwei-Plus-Vier-Vertrag)’과 두 달 후 체결된 ‘독일-폴란드 국경협약(deutsch-polnische Grenzvertrag)’을 통해 “통일 후에도 ‘평화 교란자’가 되지 않고 1945년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유럽공동체의 충실한 일원으로 남으리라는 점을 납득”시켜야만 했다. 특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동부 국경 유지가 “유럽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기여”임을 인정하고, 동부지역과 관련한 일체의 영토 주장을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통일과 자유를 완성”한 독일통일로, 국민국가 독일의 정체성 문제는 해결되었다.⁵⁰⁾ 적어도 2010년 그리스 금융위기까지는 말이다.

통일 전 서독 사회에서는 과거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반민족주의(反民族主義, Antinationalismus) 정서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마저도 보수반동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 2010년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독일 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던 그리스인들은 이런 반민족주의 정서를 토대로 한 통일독일을 상대로 ‘히틀러’, ‘나치’, ‘제3제국’ 등 날선 비난을

49) 이용일, 앞의 글 100쪽.

50) 정효숙, 앞의 글, 83쪽. 여기에 따르면 2+4협약에서는 통독 후 독일의 NATO 잔류, 독일 군대 규모 제한, 핵확산금지조약, 동부 영토 문제 등이 규정되었고, 독일-폴란드국경협약에서는 오더-나이세 경계를 침범불가(unverletzlich)로 확정했다.

쏟아냈다.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1930~)는 유로존 위기가 EU를 ‘독일제국(a German Empire)’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유럽 안에서 ‘제4제국’의 도래를 언급하면서 독일의 팽창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더-나이세 경계(Oder-Neiße-Grenze)”가 아니라 독일 자본의 유럽 지배를 염려한 것이다. 독일은 사업가와 정치가를 앞세웠을 뿐이지 여전히 침략자로 여겨졌다. 이렇게 ‘독일문제’의 핵심이 근대 국민국가의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팽창 혹은/그리고 압축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으로 옮겨갔을 뿐 본질은 그대로이며, ‘경제적 단호함과 ‘군사적 자제’의 독특한 결합이야말로 권력의 새 얼굴이라는 비판이 일었다.⁵¹⁾

2015년 유럽 난민 위기에 중동부유럽 회원국이 반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려를 기반으로 했다. 곧, “메르켈은 남유럽에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선생님처럼 엄격하게 굴었고, 그에 대한 반발이 ‘히틀러 메르켈’, 그리고 EU 안에서 독일의 세력이 너무 커졌다는 불만으로 나타났다.”⁵²⁾ 유럽 난민 위기 때 독일이 난민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요구가 컸다. 독일 연금체제의 붕괴를 방지하고, 초고령·저출산 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고, 유로화 체제에서 제조업 경쟁력과 수출호조를 지속하려면 이주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2013년 기준 독일 경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3천 20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한 몫 했다. 독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독일의 정치경제적 이해와 인도주의,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상쇄 심리가 맞물린 이상적인 해법으로 여겨졌다.⁵³⁾

독일 정부의 이런 계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독일 내부의 반발과 극우주의의 등장이었다. 난민의 대량 유입에 따른 전통적인 공포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2016년을 전후하여 이슬람 테러조직이 일으킨 테러는

51) 정효숙, 앞의 글, 85-87쪽.

52) 정효숙, 앞의 글, 90-91쪽.

53) 김춘식, 「유럽 난민 문제와 독일 극우주의의 부활」, 『독일연구』 33, 한국독일학회, 2016, 169-170쪽.

유럽 사회의 공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반난민·반이슬람을 외쳐온 각국의 극우주의자들이 결집하게 하였다. 특히 독일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테러가, 그 동기는 다르지만 모두 다 외국계이거나 난민이었다는 점은 독일 국민을 공포와 경악에 빠지게 했다. 물론, 사태가 여기에 이른 데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유럽 난민, 이민자의 2세, 3세가 급진적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민자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동질성 결여와 공통된 정서의 결여가 유럽의 반난민 정서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다.⁵⁴⁾

이런 일련의 과정과 문제점은 뒤늦게 국제적인 난민 문제와 조우한 우리에게서도 발견된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로 “보수 정치인, 근본주의 기독교, 청년, 여성들 간의 감정적 연합”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손꼽힌다. 특히, 그 속에서 ‘한국 여성’이 “우파 정치인과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의 보호자로서의 우월적 위치”를 구성하는 “수동적 기호”로 활용되거나 “한국 남성 보호를 요청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우익적·식민주의적 배제를 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 이유는 인터넷 반다문화화(反多文化) 담론이 ‘성범죄자로서의 이주 노동자’와 이에 대한 상호구성적 대립항으로 ‘검탈당하는 한국 여성’을 동원함으로써 꾸준히 형성해 온 우익적 불안과 위기감을 2018년 예멘 난민에 그대로 투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면서 더 광범위하게 확산했기 때문이다.⁵⁵⁾

이 점은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018년 8월 난민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우호적 인식(50.7%)이 적대적 인식(44.7%)보다 높았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찬성 35.8%, 반대 61.1%로 결과가 뒤집혔다.” 이

54) 국민호·양연희, 앞의 글, 106쪽.

55) 전의령, 「타자의 본질화 안에서의 우연한 연대: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반대의 젠더정치」, 『경제와 사회』 제125호, 비판사회학회, 2020, 360-401쪽.

가운데서도 20-30대, 여성, 보수당 지지자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까닭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난민 수용이 심각한 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유럽의 난민 수용 반대주의자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들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평화적인 정복사업”을 하는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⁵⁶⁾

우리나라의 反難民 여론은 난민협정 체결과 발효 이후 ‘입국은 잘 허가하면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보호하는 데 인색한 나라’라는 이중적인 평가와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의 힘든 신청절차를 겪으면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난민 신청자들은 물론, 난민 지위를 취득한 이들조차도 “한국 사람들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난민이 누구인지, 난민이 왜 한국에 왔는지, 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타자로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난민들의 이러한 주장은 역설적이게도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여론이 내세운 주요한 논거에서도 확인된다. 취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난민을 가장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에 대한 우려, 가짜 난민 생계비 유지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출신 무슬림 신청자의 테러 및 범죄 불안 등은 우리가 아직 겪어 보지 못한 유럽발 난민 위기 때 발생한 사건들을 확대 재생산해 낸 가짜뉴스에 불과하다.⁵⁷⁾

난민 반대 여론의 근거는 “글로벌 극우로서의 반다문화”라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냉전·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산업화 세력’과 탈냉전·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화세력’”, 또는 “한국식 ‘우파’와 ‘좌파’”라는 기존의 적대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 추동되는 노동과 민족의 이동, ‘임금의 하향 평준화’ 및 부의 양극화를 문제 삼는다. 반다문화적 여론에서 다문화정책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 서민과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일 뿐

56) 김용환, 앞의 글, 23쪽.

57) 소윤정·정은배, 앞의 글, 70-73쪽.

만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규정된다.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노동, 고용, 외채, 주택 등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포함하는데, 이 상황에 대한 서민적 “불만과 좌절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자본이 재생산해온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이주노동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난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⁵⁸⁾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지점에서 지배적인 키워드가 된 ‘민생’의 정치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근대 국민국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국가 기능을 포기하고 자본의 대행인 역할에 집중하는 ‘국가 없음’의 상황에서 민생은 역설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틀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생의 정치’가 (재)생산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 또는 생존과 안전을 관리하고 증진 시키는 주체로서, 이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민국가 안에서 한국인의 생계, 안전, 재생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노는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국민의 권리라고 말한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요원해 보이는 “국가 없음”의 상황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특권적 타자와 그 특권의 부당함을 상상하고, 더 나아가 타자를 완전히 추방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려진다는 데서 ‘민생의 정치’는 보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⁵⁹⁾

근대 국민국가의 ‘의미로서 경계’는 근대 국민국가질서에 의해 미리 사유된 결과물을 국민의 의식에 각인시킨 것이다. 아감벤이 말한 ‘삶의 형태(form of life)’를 가지려면 ‘의미로서 경계’를 국민국가질서에 의해 미리 사유되기 전, 곧 선형적(transzendental) 주관성에서 사유해야 한다. 국가가 나를 대신해서 사유한다면 자본주의적 국가에 의한 폭력과 경제 발전에 대한 약속에 따라 정치 권력과 자본의 사유 결과물로서 ‘나’

58) 전의령, 「인터넷 반다문화담론의 우익 포퓰리즘과 배제의 정치」, 『경제와사회』 제116호, 비판사회학회, 2017, 400-402쪽.

59) 전의령, 위의 글, 416-418쪽.

의 사유가 비국민 또는 난민을 적이나 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게 한다. 곧, ‘물리적 경계’에 상응하는 ‘의미로서 경계’를 내면화하고, 타자를 차별하고 적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혹은 ‘나’가 공동체적 사유를 의심하면서 괄호에 넣고, 공동체들의 경계 혹은 사이 공간에서 타자·난민으로서 ‘사유하기’를 실천해야 한다.⁶⁰⁾

반다문화, 반난민 극우주의자, 또는 우익 포퓰리즘의 주장은 타자·난민으로서 ‘사유하기’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타자의 상실은 주체의 소외, 격리, 나아가서는 상실을 뜻한다. 심각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근대 국민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역별로 상이하게 확산되면서 ‘의미로서 경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의미로서 경계’를 넘나드는 타자의 월경이 신속하고 대규모일수록 봉쇄와 驅逐의 요구는 더욱더 강렬해진다. 그러므로 관용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사실상 타자로서 배제되고, 추방되고 있음을 직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유하기’를 실천해야 한다.

V. 면역(免疫, im-munitas)의 시간과 난민

최초 발생국인 중국에 이어 한때 확진자 세계 2위를 기록했지만, 신속한 역학조사와 강력한 방역 조치로 2월 18일 이후 61일만인 4월 1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 확진자가 한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언론은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성공 요인으로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 협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도력(리더십)과 시민정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⁶¹⁾ 한편에서는 “유럽 일부 언론들은 한국 방역 시

60) 하용삼·배윤기, 앞의 글, 88-93쪽.

61) 해외 언론이 본 한국 코로나 19 방역 100일 키워드 ‘투명성, 열린소통, 민관협

스팀의 핵심인 3T(Test, Trace, Treat)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는데, 외교부 장관은 독일공영방송인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질의에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안정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제기는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고 일갈”했고, “사생활은 중요하지만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생활을 제한할 수 있고, 우리는 강한 법체계가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⁶²⁾

취임 3주년을 맞은 대통령의 대국민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고,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는 자신감이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면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장 문답에서는 이를 “디지털 뉴딜”로 표현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 보도 제목이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인 만큼, 코로나19 위기를 고용 안전망 강화의 기회로 삼는다는 포부도 분명히 했다.⁶³⁾

이른바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는 점이 주의환기 되고 있지만, “K방역” 관련 기사에서는 “보편성과 동일성에 기반을 둔 근대 국민국가질서”라는 낯익은 향기가 강하게 배어 나온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권”이 제한되더라도 잘 참아 준 의료진과 방역 당국,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덕분에”, 국가는

력’, 파이낸셜뉴스, 2020.05.01.기사(<https://www.fnnews.com/news/202005011450232322>).

62) ‘K방역’ 외교 나선 강경화... 해외 공관장과는 ‘포스트 코로나’ 논의, 아시아경제, 2020.05.15.기사(<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1508464791777>).

63) 文 포스트코로나 첫발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머니투데이, 2020.05.11.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017247666651>).

“생존권”을 보장해줄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활성화를 완수 해내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의 신상과 동선이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낱낱이 공개되는가 하면, 확진자가 속출한 지자체와 종교단체는 바이러스의 온상과 사이비범죄집단으로 공격당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를 앞두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클럽과 방문객은 뜬금없는 성소수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바이러스감염증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는 개별 국가가 확산속도와 규모를 제어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브라질 등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 정부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단 지도자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지지하고 따르는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에 따른 것”이다.⁶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1만 달러 이하로 인간 계놈 전체의 배열 순서를 정리하고, 휴대폰을 지상 어디에서나 사용할 만큼 거대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이 조만간 구축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놀랍게도 판데믹과 그 원인인 병원균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비롯되었다.⁶⁵⁾ 이런 사태를 과장하고, 단순화시켜 말하면, 우리의 방역 조치가 중세보다 나은 부분은 우리 몸을 축구장 크기라고 할 때, 축구공 가죽 하나쯤의 크기에 불과한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일 수도 있다.

로베르토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는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는 이민자들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 전혀 가당치 않은 것이긴 하지만, 면역이라는 물음이 맡고 있는 중심적 역할을 또 다른 영역에서 보여”준다면 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면역은 어떤 문턱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지점에 이르면, 결국 생명을 부정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64) 獨메르켈 지지율 79% 伊콘테 71% ··· 코로나가 그들을 띄웠다, 중앙일보, 2020.04.16.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756090>).

65) Nathan Wolfe, 강주현 옮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김영사, 2015, 26-27쪽.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향해 강박적으로 나아가는 자기면역적 정체(regime)에 내맡겨진 세계, 곧 인간의 삶은 자신의 복잡성 속에서”, “외부의 적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또한 파괴하는 것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자기가 자기 자신 말고는 다른 것을 결코 보지 않은 채 스스로를 반영하고 있는 거울을 깨버리는 것이다.’”⁶⁶⁾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난민의 출현은 근대국가가 “면역적 강박 속에서 전지구적 세계[mondo globale] 혹은 세계의 전지구성(globalité)을 정복하려 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외부를 결코 관용하지 않으며 외부라는 관념 자체를 배제하며 <일자>-모두[!Uno-tutto]의 논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질성(caractère étranger)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계선의 폐쇄, 곧 봉쇄적 대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베스트팔렌 모델’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데도 근대 국민국가의 국경은 봉쇄되고, 난민은 추방된다.⁶⁷⁾ 이것을 가속화하는 “전지구화는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간혀 버렸음을 나타”내는데, “자신과 동일화된 세계(문자 그대로 ‘세계화된[mondializzato]’ 세계) 속에서 개인적·집단적인 삶을 규제한다는 유일한 원칙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면역화된 세계는 “바깥이 없는 세계”로서 “정의상 안내부[가] 없다.”⁶⁸⁾

근대화가 자기 면역을 밀어붙인 과정이라는 에스포지토의 통찰은 타자, 곧 난민 문제와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련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난민 문제는 보편성과 동일성에 기반을 두고 소유, 자유, 주권 등 근대적 가치를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동시에 자기 내부의 갈등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면역화 메커니즘에 대한 반성의 계기와 시간을 제공한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66) Roberto Esposito, 김상운 역, 「면역화와 폭력」, 『진보평론』 제65호, 진보평론, 2015, 312-322쪽.

67) Roberto Esposito, 김상운 역, 위의 글, 318-320쪽.

68) Roberto Esposito, 김상운 역, 「면역적 민주주의」, 『문화과학』 제83호, 문화과학사, 2015, 404-405쪽.

는 무누스(munus; 의무/전염병)에서 면제된 예외를 공유하는 공동체(communitas)가 아니라, 경계 밖을 인정하고 무누스에 노출된 면역(immunitas)에 이르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참에 선진 근대 국민국가가 제시하는 보편성과 동일성에 누구보다 잘 순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내면화해온 ‘의미로서 경계’의 문제점에 대해 타자로서 ‘사유하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난민법』[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일부개정]
 Emerich Coreth, 진교훈 옮김, 『철학적 인간학』, 종로서적, 1986.
 Nathan Wolfe, 강주현 옮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김영사, 2015.
 Moritz Schlick, 안종수 옮김, 『연관된 철학의 문제들』, 고려원, 1992.
 Roberto Esposito, 김상운 역, 「면역적 민주주의」, 『문화과학』 제83호, 문
 화과학사, 2015.
 _____, 김상운 역, 「면역화와 폭력」, 『진보평론』 제65호, 진보
 평론, 2015.
 국민호·양연희,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디아스포라연구』 13권 1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
 소, 2019.
 김준현, 「48체제와 38선 이남의 내적 난민들」, 『돈암어문학』 제32집,
 돈암어문학회, 2017.
 김세서리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시대, ‘포용(inclusion)의 정치
 학을 위한 유교적 시론」, 『유학연구』 제46집, 충북대학교 유학
 연구소, 2019.
 김용환, 「협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가톨릭철
 학』 31집, 한국가톨릭철학회, 2018.
 김철민, 「EU 난민 위기에 대한 중동부유럽의 관점과 전략」, 『EU연구』
 제4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6.
 김춘식, 「유럽 난민 문제와 독일 극우주의의 부활」, 『독일연구』 33, 한
 국독일사학회, 2016.
 김치완, 「문화적 형식으로 ‘재현’된 2010년대 근대해항도시 제주의 표상」,
 『島嶼文化』 제48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6.
 박경하·이석희, 「인문학의 사회적 실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7회
 인문학학술대회:사회 속의 인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
 원, 2003.
 박종일 외,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 한국의 이주자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 소윤정·정은배, 「한국 교회와 국내 난민 선교」, 『성경과 신학』 87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8.
- 안병익,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대내외적 변화: 2015년 난민위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68권, 한국민족연구원, 2016.
- 유경동, 「평화를 위한 난민 신학」, 『신학과 사회』 33권 2호,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9.
- 이용일, 「추방, 탈출, 난민: 독일문제와 이주(1945-1998)」, 『역사와 세계』 38, 효원사학회, 2010.
- 임진희, 「난민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관련 정책 연구: 유럽 난민문제를 중심으로」, 『現代中國研究』 20권 3호, 현대중국학회, 2018.
- 전의령, 「인터넷 반다문화담론의 우익 포퓰리즘과 배제의 정치」, 『경제와사회』 제116호, 비판사회학회, 2017.
- _____, 「타자의 본질화 안에서의 우연한 연대: 한국의 반다문화와 난민반대의 젠더정치」, 『경제와 사회』 제125호, 비판사회학회, 2020.
- 정효숙, 「독일문제는 해결되었는가?—독일문제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세계』 50, 효원사학회, 2016.
-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의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한국학논집』 제4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 최진우,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문화와 정치』 3권 1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6.
- 하용삼·배윤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아감벤의 국민, 인민,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2집, 대동철학회, 2013.
- 홍정화·김은혜, 「한국 난민정책의 한계와 대안—제주 예멘 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15권 4집, 2019.

- 홍태영, 「4·19와 국민국가의 계기」, 『문학과 사회』 23권 제1호, 문학과 지성사, 2010.
- _____, 「타자의 윤리와 환대 그리고 권리의 정치」, 『국제·지역연구』 27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8.
- 황임경, 「자기방어와 사회안전을 넘어서-에스포지토, 데리다, 해러웨이를 중심으로 본 면역의 사회·정치철학」, 『의철학연구』 제16집, 한국의철학회, 2013.
- ‘K방역’ 외교 나선 강경화… 해외 공관장과는 ‘포스트 코로나’ 논의, 아시아경제, 2020.05.15.기사(<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51508464791777>).
- 獨메르켈 지지율 79% 伊콘테 71% · · · 코로나가 그들을 띄웠다, 중앙일보, 2020.04.16.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756090>).
- 文 포스트코로나 첫발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머니투데이, 2020.05.11.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017247666651>).
- 해외 언론이 본 한국 코로나 19 방역 100일 키워드 ‘투명성, 열린소통, 민관협력’, 파이낸셜뉴스, 2020.05.01.기사(<https://www.fnnews.com/news/202005011450232322>).

ABSTRACT

Philosophical Issues on the Emergence of and Responses to Refugees

Kim, Chi—wan^{*}

The modern “refugees” occurred during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This means that the refugee problem we are facing now is in linked with the origin of the modern nation-state. The recent emergence of refugees we are confronting is set in the “life driven out of bounds”, which is linked to the division of modern national states or the creation of new ones, namely Diaspora. At this very point, the refugee problem raises philosophic questions about the modes of space and life. This study corresponds to a foundation study in the field of philosophy, with the theme “The Reflections on Jeju Island's History Through ‘Cumda’ and Rethinking of Refugee.” Through the emergence of refugees, we feel that the “Hatred to unusualness and different things” becomes more solid than any other era in human history, and it is the critical mind this study. To examine critical mind, this study first reviewed the fact that the emergence of refugees as the Other is the behavior which goes over not only a border as a physical boundary but also a boundary that internalizes it. Next, this study examined the European refugee issue in terms of “Blocking borders, excluding the Other” as the reason why such actions are directly linked to the result of strengthening the order of the modern nation-state, rather than breaking the boundaries of the modern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nation-state. And it was reviewed that deporting refugees is a sign of the loss of the Other that guarantees the sustainability of the subject and in the end, excludes and expels ourselves as the Other. Roberto Esposito once claimed that the emergence of refugees is caused by conquering the global world (mondo globale) amid immunological obsessions. Esposito's insight that modernization is the process of pushing autoimmunization provides an opportunity and time for reflection on the autoimmunization mechanism in which the refugee problem tries to neutralize conflicts within itself.

Key-words: refugees, the Other, crossing the border, Blocking borders, expels, dis-placed, Roberto Esposito.

논문투고일 2020. 8. 26.

심사완료일 2020. 10. 1.

게재확정일 2020. 10. 5.